

##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커피 2잔·빵 1개 시켰는데도 ‘1인 1음료’...카페 규정 두고 갑론을박	사회	
2	JTBC,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추진	경제	
3	李, ‘내년 교황 방북’ 피스메이커 구상 재가동... “두드리면 열릴 것”	정치	

### [1]기사/뉴스요약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1인 1음료 주문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친구 두 명과 함께 카페에 가 커피 2잔과 빵을 주문했는데, 카페 주인이 인당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 사람의 커피 대신 빵을 주문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해서 (아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손님 입장에서는 이미 일정 금액을 지불하려 했음에도 업주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카페 업주가 ‘1인 1음료’ 원칙을 유지하는 데에는 매장 운영상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페의 주요 수익원은 음료, 특히 커피”라며 “커피는 원두와 물, 우유 등을 활용해 재료비 대비 마진율이 높은 편이지만 빵이나 베이커리류는 재료비 비중이 높고 외부 납품을 받는 경우도 많아 수익성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업주 입장에서는 빵보다 음료 판매가 매장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좌석과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성격도 있다는 분석을 내놴다. A씨는 “여러 명이 방문하면 인원수만큼 주문을 받아야 임대료, 인건비, 냉난방비 등 매장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업주들이 있다”며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이후 다른 손님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빵은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먹기 쉽지만, 음료는 개인별 소비가 일반적”이라며 “업주 입장에서는 3명이 방문해 음료 2잔과 빵 1개를 주문하는 상황을 좌석 이용 대비 매출 측면에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매장 규칙이 1인 1음료라면 따르면 된다”, “업주가 정한 운영 방식이고 맞지 않으면 다른 카페를 이용하면 된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빵 가격도 적지 않은데 음료만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짜장면 두 개에 탕수육을 시키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니냐”며 “빵이 4000~5000원 이상이면 충분히 비용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가 커피 매장은 운영상 1인 1메뉴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격대가 높은 카페라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기사/뉴스요약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앙그룹 계열사 JTBC가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12일 만기가 돌아온 206억 원 규모의 회사채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중앙그룹의 모체인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과 사적으로 협의해 채무조정, 구조조정 등을 하는 절차다.

JTBC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계열사 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4개 사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등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NICE신용평가는 이날 JTBC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D’로,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CP) 등급을 ‘C’에서 ‘D’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D’는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최하위 등급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부도 상태를 뜻한다. 한국신용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등급을 ‘BB’에서 ‘B’로 내리고 등급 감시 목록(하향 검토)에 포함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JTBC 유동성 위기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JTBC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으로 과정의 중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포함돼 있어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3) 기사/뉴스요약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지금 단절돼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남북 대화 재개, 한반도 화해 차원에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교황의 방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 구상을 재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레오 14세 교황과 교황청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겸 국무원장을 각각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교황님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교황과 30분간 면담한 자리에선 남북 관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민주화 과정에서 천주교의 기여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천주교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표시했다”며 “이에 대해 교황의 호응하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파롤린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대화 노력에 대해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이 한국에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교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황의 방북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교황의 방북 성사는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2018년 10월과 2021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바티칸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으면서 방북이 무산됐다. 유 추기경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황이 ‘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며 “교황이 미국인이다. 북-미 관계를 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황에게 ‘하느님의 품’ 조각상과 한국 백자 다용도 합을 선물했다. 청와대는 조각상에 대해 “성경 속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절제된 조형미로 표현한 조각 작품”이라며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화해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남한을 적대시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이게 8만원?”...월드컵 ‘바가지 물가’에 외신 기자도 경악	스포츠	
2	윤호중 행안장관 “잠실 사적 검문·허위 유포 엄중히 책임 묻겠다”	정치	
3	호주, 영국 등 세계 곳곳서 ‘청소년 SNS 규제’...한국도 입법 움직임	사회	

### [1]기사/뉴스요약

2026 북중미 월드컵의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값과 티켓 가격을 두고 이른바 ‘바가지 물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장을 찾은 외신 기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야후스포츠에 따르면 ESPN 아프리카 소속 에디 도브 기자는 뉴욕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 마로코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내 매점에서 음식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시 동료 기자가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 속 도브 기자가 계산대에 올린 음식은 타블리 샐러드와 생수, 크루아상, 즉석 치킨 요리 등 단 4가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음식의 총가격은 무려 52.98달러(약 8만185원)에 달했다.

도브 기자는 인터뷰에서 “배가 너무 고파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골랐는데 50달러가 넘게 나왔다”며 “다시 줄을 서서 환불하기가 민망해 그냥 결제했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그는 “크루아상이 아주 맛있어 보이긴 한다”라면서도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크루아상이어야만 할 가격”이라며 씩씩한 농담을 던졌다. 영상을 촬영한 동료 기자는 “이건 대낮에 일어난 강도 짓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문제는 음식값뿐만이 아니다. 이번 대회 티켓 가격 역시 역대 월드컵 사상 가장 비싼 수준으로 치솟아 축구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The Athletic)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은 대회 기간 중 전체 104경기 중 95경기의 티켓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했으며, 평균 인상률은 35%에 달했다. 특히 결승전의 1등석 티켓 가격은 초기 6730달러(약 1018만원)에서 무려 1만990달러(약 1663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폭리 논란에 대해 FIFA 측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경기에 수백 달러를 흔쾌히 지불하는 북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여기서 얻은 수익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 축구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한 기자로부터 이번 월드컵의 살벌한 티켓 가격에 대한 질문을 받아 “솔직히 말해서 나라도 그 돈을 내고는 안 볼 것”이라며 혀를 내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 2)기사/뉴스요약

정부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 대해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배부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3) 기사/뉴스요약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움직임이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관저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연내 입법해 2027년 봄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내려받기와 라이브 방송을 차단하고, 18세 미만의 성적 대화를 흉내 내는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동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봄 정부가 11만 60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공론조사에서 학부모의 83%가 SNS의 유해성에 공감하고 10명 중 9명이 연령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면 금지가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의 선제적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 삼아 북미와 유럽, 남미 대륙 등 전세계 곳곳으로 규제가 번지는 추세다.

캐나다 정부는 10일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어긴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를 벌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르면 올여름 EU 차원의 미성년자 SNS 금지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고, 다음 달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아일랜드는 회원국 공통의 16세 미만 이용 금지를 주요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앞서 브라질도 올해 3월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법을 시행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에는 14세 또는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야간 알림과 중독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규제 신설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다만 규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호주에서는 시행 6개월 만에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보도에서 호주 청소년들이 나이 인증을 손쉽게 우회해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청소년의 뉴스 접근권까지 막아 ‘디지털 고립’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NS 규제 대상이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라는 점에서, 잇따른 제재가 국가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은 영국 정부의 조치를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 전문 매체 EU투데이는 “16세 미만 SNS 규제는 더 이상 변방의 제안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온라인 세계를 누가 통제할지를 놓고 각국 정부와 빅테크 간 새로운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짚었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땀땀하십니까”	사회	
2	트럼프, 이란 석유 제재 풀어주고 돈도 퍼준다	국제	
3	조국 “선거연대 거부된 상황서 패배...총선때 어떻게 할지 성찰”	정치	

[1]기사/뉴스요약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2일 선고된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 안 된다. 뻔한 계산”이라며 “이 재판에 흑시라도 특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수사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특검을 향해 “땀땀하십니까? 검사님들, 땀땀하십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제지하자 오 시장은 “제가 또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며 “실체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진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2)기사/뉴스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직후부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엑시오스 등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이 원유 수출에 필요한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MOU 14개 항에도 이 내용이 10조에 담겼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이란산 원유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 3국 정부와 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MOU를 통해 각종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MOU 서명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핵 협상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초기 인센티브라고 WSJ는 진단했다.

종전 후 이란 지원을 위해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재건 및 개발 기금'을 조성한단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이 투자 약정을 맺었다.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 동기가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에너지, 물류, 제조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 등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다소 성급하게 제재 완화부터 허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자 프랑스 예비양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건 MOU일 뿐"이라며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이란)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 3)기사/뉴스요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자신이 출마했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와 관련해 "선거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범민주 진영이 패배했다. 저의 부족과 부덕 탓"이라고 밝혔다. 당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자유와혁신이 '5판전'을 벌인 끝에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당선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 "울산·세종·오산·안산·창원·김해시장 등 '선거연대'가 이뤄진 지역과 달랐다"고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며 줄곧 강조하고 추구해왔던 '새로운 다수 연합' 길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절감한다"며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택을 선거의 구도와 결과가 2028년 총선에서 '전국화'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깊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을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양당은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 전 대표가 선거 기간 내내 충돌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우재준 “지도부 임기 조기 종료하고 재출마하라”...국힘 최고위 또 충돌	정치	
2	美법원 “워비어 유족에 北동결자산 259억 쥐야”	국제	
3	[단독]전국 256개 선관위중 투표지 인쇄 늘린곳은 한곳도 없었다	사회	

[1]기사/뉴스요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과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우리 지도부 역할이 다했다는 점, 다음 지도부를 위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 참정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태이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렇게 해 준다면 저부터 장동혁 대표님을 정말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우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조광한 최고위원은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몹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당의 난맥상만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 최고위원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우 최고위원은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고, 조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 2)기사/뉴스요약

북한에 억류됐다가 뇌사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의 부모에게 북한 관련 동결 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웬비어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된 후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곧 숨을 거뒀다. 그의 가족들은 북한 당국의 고문 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11일 결정문을 통해 JP 모건체이스은행에 동결된 1713만 달러(약 259억 원) 규모의 북한 동결 자산을 웬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고인의 부모는 JP모건체이스에 동결된 'A Q(압둘 카디르)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파키스탄 정부의 방조하에 북한, 이란, 리비아 등에 돈을 받고 핵무기 개발 기술을 팔았다. 이에 미 행정부는 이른바 'A Q 칸 네트워크'를 불법 핵확산 조직으로 간주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하월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원고가 A Q 칸 네트워크가 동결 자금의 실제 송금 주체였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에 비춰 볼 때 A Q 칸 네트워크는 해당 자금의 원천이며, 북한의 대리 조직"이라고 밝혔다.

웬비어의 부모는 2018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법원은 "북한이 5억113만 달러(약 7575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은닉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2019년 미 행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2020년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동결 자금 24만 달러, 2023년 뉴욕 멜런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산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 (3)기사/뉴스요약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256개 시군구 선관위 중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 인쇄비율을 높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50% 비율 하한에 따라 지역 선관위 사무국이 제각각 만든 인쇄 비율을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는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지역 선관위 중 선거에 앞서 사무국이 정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수정해 의결한 곳은 경기 화성시 만세구 1곳 뿐이었다. 이곳도 사무국이 정한 인쇄비율 60%를 선관위 회의에서 50%로 축소한 것이어서 실제 회의를 통해 인쇄 비율을 높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서울 송파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 3개 지역 선관위는 이같은 회의조차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면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중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들 지역 선관위는 선거인 수의 50%만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지방선거 당일 이들 지역에서는 예상을 웃도는 투표율에 대비하지 못한 탓에 오후 들어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가 용지가 없어 기표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끝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만약 대면 회의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비율에 대한 우려나 의견 개선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등 문제가 불거진 곳들이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정하면서 대면 회의조차 하지 않았던 3곳 중 하나라는 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형적 인재(人災)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회의로 해당 안건을 의논한 곳들 중 99.9%가 원안 그대로 도장 찍기만 했다는 것은 각 구·시·군 선관위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근거”라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뿐만 아니라 근본적 인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45일간의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노태약, 선관위서 수당 4년간 1.8억 받아...3배 '셀프 증액'도	정치	
2	美 금리 약재도 뚫었다... 사상 첫 '9000피' 시대	경제	
3	'청자 쇼크' 안긴 두 점... 佛로 건너간 고려청자 한쌍에 세계가 깜짝	문화	

###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퇴한 노태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년간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수당으로만 1억79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으로 1억7910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수당체계는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290만 원씩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15만 원의 출무수당, 회의 안건 1개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 등 3중 구조로 이뤄졌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이 취임하던 2022년엔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매달 290만 원씩 지급됐다. 감사원이 같은 해 11월 감사에서 “법을 위반해 월정액 등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국회는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이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노 전 위원장도 이 시점부터 다시 월 290만 원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 자체 의결로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이 중단돼 수당이 줄어들자 실비 수당을 3배로 인상한 것이다. 안건검토수당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이 재개된 2024년 1월부터 다시 10만 원으로 원상회복됐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만 안건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은 내규에 따라 지급됐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등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도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전 의원은 “중앙선관위 최고 수장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받고, 그 길이 막히자 다른 수당을 3배로 늘리는 꼼수 ‘셀프 증액’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회의 후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수사의뢰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 2)기사/뉴스요약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누르며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을 돌파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세계 시가총액 순위 10위에 들었다.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5% 오른 9,063.84로 장을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00억 원, 7700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조28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선 금리 인상 우려가 컸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하면서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표현을 삭제했고,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도 3.4%에서 3.8%로 높였다.

이 같은 연준의 매파적인 성명이 공개된 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도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 더욱 유력해졌다.

그러나 코스피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E'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메모리 공급난을 호소해 반도체 주 투자 심리에 호재로 작용했다. 삼성전자(+4.62%)와 SK하이닉스(+6.51%)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는 메타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시총 순위 10위에 올랐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을 돌파한 이유는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적 전망이 더 가파르게 상승 중인 메모리 기업들엔 금리 인상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빅3' 시가총액이 4조 달러에 근접하기도 했다.

장기공급계약(LTA)으로 메모리 산업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증시의 반도체 대형주 쏠림은 더욱 심화됐다. 18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총에서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로 커졌다. 또 코스피가 2.25% 상승했음에도 상승한 종목은 112개에 그치며 하락한 종목은 791개였고, 코스닥은 3.01% 하락했다.

### (3)기사/뉴스요약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최근 개막한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프랑스 우정의 140년’에서는 1888년 고종이 프랑스 사디 카르노 제3공화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청자 모란 넝쿨무늬 꽃모양 대접’과 ‘청자 앵무새무늬 대접’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두 대접은 같은 해 5월 카르노 대통령이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기념해 프랑스 대표 공예품인 세브르 도자기 3점을 조선에 보낸 데 대한 답례였다. 프랑스 도자에 감동한 고종은 고려청자 전성기 시절인 12~13세기 대접 2점을 역사서 등과 함께 프랑스로 보냈다.

손명희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은 “두 대접은 서양에서 ‘말로만 듣던’ 고려청자의 실체를 공식화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된다”며 “해외 박물관과 컬렉터들의 한국 미술품 수집의 출발점이 된 문화유산”이라고 했다.

1888년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는 고종이 선물한 두 고려청자가 세브르도자박물관에서 전시되도록 추진했다. 기증 이후 현지에선 두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프랑스 언론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발간 잡지 등이 이를 소개하며 고려청자의 존재를 서구 사회에 알렸다. 이후 플랑시는 자신이 수집한 한국 도자들도 프랑스 주요 박물관에 기증해 한국관 조성과 한국 도자 컬렉션 형성에 기여했다.

고종의 선물은 서구 학계에서 고려청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당시 고려청자는 중국이나 일본 도자의 아류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영국의 중국 도자 전문가 스티븐 부셀은 저서 『오리엔탈 세라믹 아트』(1896년)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받은 두 점의 고려청자는 중국 자기와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가진 한국 도자가 실존한다는 걸 증명했다”고 기록했다.

19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도자는 서구권 컬렉터와 박물관의 수집 대상이 됐다. 고려청자는 조형적 우수성과 역사성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인 도자로 주목받았고, 유럽과 미국의 박물관들은 한국 도자 컬렉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14년 영국 빅토리아앤드앨버트박물관(V&A)은 ‘르 블론드 한국 도자 소장품’전을 개최해 한국 도자만을 주제로 한 영국 최초의 전시를 열었다. 이후 미국 경매시장에서도 한국 미술품이 활발히 거래됐으며, 고려청자는 대표적인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해외로 유출된 한국 미술품은 오늘날까지도 해외 박물관의 한국 컬렉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 [황실수설/장원재]與 대표의 '폴더 인사'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유럽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른바 '폴더 인사'였다. 이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이 관례상 당 대표가 참석해 온 대통령 출국 행사에 정 대표 대신 김민석 국무총리를 부르며 ‘당청 갈등설’이 일파만파로 퍼진 지 아흐레 만이었다.

▷공항서 돌아온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등의 극찬을 해가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집권 여당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등에서 사사건건 강경 노선을 앞세워 온 정 대표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90도 인사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폴더 인사와 낯 뜨거운 칭송이 오히려 ‘과공비례(過恭非禮)’라는 것이다.

▷정 대표의 폴더 인사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탄핵 하자는 협박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대표의 발언 이후 친명계는 6·3 지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8월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주변에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나.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고 했다. 필요하면 고개를 숙여서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 이란 해석이 많았다.

▷대통령에 대한 당 대표의 '폴더 인사'가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24년 1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그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문제 삼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직후였다. 당시 한 의원은 “대통령님에게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들어선 다음이었다.

▷민주당 안팎에서 정 대표의 폴더 인사로 당청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뉴이재명’으로 통하는 친명그룹과 노무현-문재인 시절부터 당의 주류로 있었던 범친문계의 세력 다툼이 쉽게 정리되기 힘든 탓이다. 2024년 한동훈 의원의 폴더 인사를 두고 “이건 미봉책으로 곧 2차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 대표였다. 이번 '폴더 인사'의 귀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정 대표일지도 모른다.